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성공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2017년 8월 9일 수요일 (음 6월 18일) 제18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에서 만나보는 일본 공예품 전주시는 8일부터 13일까지 전주 교통아트미술관에서 일본 공예품을 전시하는 '제16회 가나자와시 전통공예 기획전시회'를 연다. 이날 전시회 오픈식에는 시카다 사토시 가나자와시 시민국장과 쓰다 히로시 세공장인 등 가나자와시 방문단 5명과 김동식 국가무형문화재, 김혜미자·고수환·김종연 등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백철희 고감한지 대표, 박갑순·윤소희 등 한지공예가, 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2면〉

"정부, 서남대 정상화 노력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에 요구… "교육부서 정상화 계획 반려"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이환주 남원시장도 이낙연 총리에 요청
교육부가 대학 폐교시킬 경우 피해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돌아갈 듯

서남대학교 존폐 문제에 따른 차후 결정이 어떻게 진행 될지 주목된다.

서남대학교 인수 문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8일 만나면서 정상화를 요구했고 지역에서도 김춘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이환주 남원시장 등도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서남대 폐교 방침 변경과 정상화 계획 보완 제출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학교 인수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교육부가 구재단이 횡령한 교비 333억원을 변제하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2070억원 투자를 약속한 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반려 된 것이다.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의 건의에 대해 공공의료인력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약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는 조직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빨리 제도를 바꿔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춘진 위원장은 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서남대 폐교는 내륙서남권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혜택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 설립된 취지에 반한 것"이라며 "새로운 재정기여자 발굴 및 정상화 계획 제출 기회를 다시한번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 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서남대 정상화 여부를 놓고 많은 의견을 나눴다. 서남대는 정치적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또한 서남대를 폐교시켜려 한다는 불신을 전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재정기여자들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남대는 비리대학이다. 여기에 학생수 감소로 대학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의과대학도 포화 상태이다. 서남대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남대를 폐교 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 서남대도 재정기여자를 찾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새로운 사정, 변수가 생긴다면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찾는게 변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서남대를 폐교시킬 경우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계획안이 서남대를 정상화시킬만한 충분한 재정기여계획이 부족하다며 불수용했다.

서남대 재학생은 1,600여명 이며, 교직원 200여명 정도이다.

교직원은 실직과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군산조선소 회생 '새 물꼬'

박재만 도의원, 도크 협력업체에 임대방안 제안
도크 활용한 영업재개로 업체들 경영 회생 기대

지난 7월 1일자로 가동중단된 군산조선소의 새로운 해법으로 조선소 도크를 지역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군산1·사진) 원내대표는 8일 언론을 통해 "현재 놀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지역 업체들에 임대해준다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윈-윈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꽉 막힌 조선소 사태의 새 해결책을 제안했다.

올 6월말 기준,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가운데 56곳이 폐업했고 전체 근로자 5,250명 중 4,700여명이 실직한 상황이며 현대중공업 본사의 유지보수 인원 5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500명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 마저도 일감이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나 다름없으며 여기에 운송업체와 인근 소상인 등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지역경제는 이미 피폐해질 대로 침체된 현실이다.

얼마 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밝힌 2019년 재가동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남아 있는 협력업체마저 모두 파산되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게 지역 업체들의 얘기다.

2019년 재가동 이전에 협력업체들의 장비는 녹슬어 버리고 숙련된 산업기능인력은 타지로 유출돼 재가동하더라도 인력난에 봉착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해상풍력 육성과 농건설 기계산업 등의 보완 먹거리 육성으로 협력업체들의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동중단된 도크를 지역업체들이 활용해 선박 생산과 조립에 나선다면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줄 거라는 게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협력업체 10여곳이 현재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와 독자적인 회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가 가능할 경우 곧바로 3천톤급 200~300억원대의 중소형선박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산조선소 도크 임대계획이 실현될 경우 지난번 군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분야 노후 선박 발주 계획을 앞당기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과 맞물려 조선업 관련 지역 협력업체들의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통 큰 양보와 금융기관의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발급이 사태해결의 관건으로 보인다.

조선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 2019년 재가동설을 불확실성을 높은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지역 업체들은 중소형 선박수주에 대한 RG발급이 이뤄질 경우 도크 임대를 통한 선박 수주와 건조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박재만 원내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대중공업과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무상 임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며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중재 역할을 주문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해주는 대책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정부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
16면 - 수능 D-100 전략